

2008년 5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전략

민경자 (충청북도 전 여성정책관)

지방정부도 국가 정책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아직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익숙치 않음)을 지향한다고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여겨진다.

지방자치단체 차원(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젠더이슈가 정책의 모든 분야와 수준 및 단계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기반이 필요한데, 현재 그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기반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효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 법 및 종합계획
2. 추진기구
3. 자원(예산 및 기금)
4. 성인지적 관점
5. 성인지 정책 도구
6. 연구기관
7. 여성단체

이렇듯 어려운 기반을 전제로 현 시점에서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1. 지방정부 성주류화 실현 전략 모색의 전제

- 공직사회의 가부장성, 일하는 방식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부여되는 과제도 하지 않으려 함)

평등의식의 부족, 여성이 우세라고 하는 의식, 여성부서의 업무라는 인식,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 부족, 조직의 가부장적 분위기

\* 각종위원회에 활동할 여성 발굴, 성별통계 등을 모두 여성정책관실로 미룸

\* 여성이면 다 여성정책하는 줄 알고 있음

지방정부의 ‘젠더’마인드 부족은 여성정책만이 아니라 여성관련기구의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젠더’관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없음 (알려고 하지도 않음)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협조를 요청하자, ‘당신 부서 업무나 평가해라’, ‘노인이 뭐가 문제냐 애들이 문제지..’한다. 이런 사람이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었다.

\* 성별로 통계를 내라고 하면 ‘우리는 여성, 남성 차별 안해요, 구분하는 것이 차별아닌가요?’한다.

- 주관 부서가 주로 여성정책관련 부서인데 이를 추진할 힘이 없음.

여성관련 부서의 위상이 낮고, 고립되어 있어 타 부서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여성정책의 주류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 여성부서의 위상 강화를 주장해 왔으나 실현되기도 힘들 뿐 더러 여성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주류화는 여성업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도 있다.

- 그러나 공직사회의 특성상 과제로 부여되거나 감사를 받게 되면 한다.

## 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전략 제안

1. 외부적인 압력 증가
2. 여성업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구조적 조치
3. 의식, 인식의 변화

### 전략 및 과제

#### (1) 외부적인 압력 증가

- 정책적 확대 및 지방정부 감사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점검
- 단체장(광역, 기초)의 의지
- 도, 시군의회회 감사
- 여성단체의 모니터 (집행부, 의회) 매니페스토

## **\* 성인지 감사**

지방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인지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대비 실천여부와 주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선정과 그 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자체의 ‘성주류화’ 수준을 감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2) 여성업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구조적 조치 (지방정부)**

- 현재는 여성부서가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어, 성주류화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
- 지자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여성업무 실행 부서와는 별도의 성평등정책 담당관이 배치되어야 함.

### **→ 성주류화 정책 업무를 정책기획부서에서 해야 함**

- 성인지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 성별통계 모니터
- 성주류화 조례 제정
-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 (지방정부 출연 연구소) 등

## **\* 성인지 정책 협의회 구성 운영**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성주류화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여성정책협의회인데 이 기구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형식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타 실국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이를 주관하는 여성부서의 위상이 낮고 이를 여성업무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업무를 ‘여성정책협의회’가 아닌 ‘성인지 정책 협의회’로 바꾸고 주관 부서를 기획관실 정책조정부서로 이관(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이므로)

하면 타 실국의 협조는 대폭 향상될 것이다. (협의회 구성은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의원, 지방정부연구원, 과별 담당직원, 여성단체 등)

- 또한 현 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도 협의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성주류화 업무를 공식업무로 지정하여 성주류화 업무를 국별 주무과 주무계의 업무분장에 명시하고 국별 주무과장을 성주류화 책임담당관으로 지명하여 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의무화한다.** 이런 작업 역시 지방정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시행케 해야 한다.

### (3) 의식, 인식의 변화

- 공무원, 각종위원회의 위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정부 연구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 성인지교육

여성정책 부서의 주무부서의 직원(심지어 계장까지) 중에는 ‘여자들의 기가 너무 세졌다’고 한탄하며 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되었지 뭘 더 올라 갈려고 해요?’하며 되묻는 사람도 있다.

행정단위가 작아질수록 관계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부서의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들이 성인지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에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만 한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업무 담당자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여성정책의 수준은 여성부서의 장(여성국장, 여성정책관, 혹은 과장 등)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성업무를 기획, 실행하느냐에 많은 것들이 달렸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책임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관리자(5급 이상) 모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 차별적 인사정책

이와 연결된 과제로 인사정책을 들 수 있다. 현 순환보직 체계에서는 여성업무담당자가 그나마 조금 훈련이 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시 ‘남성’(gender 의미의)공무원이 대체되어 시행주체의 수준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성평등정책의 지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순환보직 인사체계와는 다른 차별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3. 주체별 과제

### □ 정부의 과제

#### - 중앙정부의 공격적 역할이 중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한계 (의식 및 인식의 부족, 가부장성, 대중정서 영합 등)를 극복하고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 ① ‘성주류화’를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및 의무화

지자체의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근본 대책은 ‘성주류화’자체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성주류화를 국정의 역점과제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 ②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승진 교육시 고위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 공무원 및 지방정부 연구원대상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직무교육화

**③ 여성중심의 정책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정책기조 전환**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 활성화 보다 양성평등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 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관변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을 독식하려는 경향 배제)

**④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 여성업무’ 인식 배제**

- 통계청의 지방정부 통계 모니터 강화.
-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타 부서 업무관련 공문 시행 시 업무관련 부처에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 지방정부의 실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성별 실적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⑤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 성주류화 추진단 구성 운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자체별로 구성  
(지방의 여성단체, 전문가, 공무원 참여)
- 지자체 성주류화 모니터, 워크샵, 공동사업 등 지속 추진

**⑥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 (자격증 제도) 및 교재 개발 (공무원 수준에 맞는)**

**□ 국회**

여성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시 성주류화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각종 분야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성별 통계를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성단체**

- 지방 정부와 독립적이며 비판적인 지역 NGO

**①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이 제대로 입안, 수행되도록 모니터 및 지원  
정책토론회 정례화 및 정책제안서 제출/분야별 간담회 개최

- 의정 모니터 정례화 및 결과 발표

## ②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성주류화 파트너십 형성

- 성주류화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 \* 여성단체의 적극적 개입 필요

- 지역의 여성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및 평가작업에 개입해야 한다.
- 몇 년 전까지 여성단체가 국가의 여성관련 법·제도 그리고 정책내용 등에 대해 아우성을 쳐서 오늘의 국가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듯이 이제는 지방정부에 눈을 돌려 이들이 제대로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는지 개입해야 한다.

민선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이 높아졌고 또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요구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개입은 대단히 중요해졌다.

→ 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 추진은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성평등에 관심있는 여성단체의 몫-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성주류화 현황(성별영향평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 4. 실행 전략

- 공무원이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지 못함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 연구원을 정책파트너로 활용해야 함.

### ①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잡아라

- 이들을 움직이는 방법 모색이 핵심
- 성인지 관점이 있는 인사가 당선되게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 2010 지방선거시에 전국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여성주의자를 단체장으로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운동 전개

## ②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 여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재단 등이 지방의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 (공동사업 전개)
- 여성단체를 성주류화의 동력으로 활성화시킴  
(성주류화를 촉구하는 외곽 협조자로 지원·육성한다.)
- 수적으로 우세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에 대한 성인지 교육, 성주류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시되기 때문에 의식과 능력이 갖추어진 여성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 ③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와 성주류화 파트너십 형성

- 여성부, 혹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업으로 지역별 워크숍 지속추진

## ④ 지방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과의 파트너십 구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16개 시도 연구원장과 회동 정례화
- 연구기관별 정책실(팀)장들간의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추진